



[산업]  
현대모비스  
中 스타트업 투자  
'협업의 창' 활짝

05

[라이프]  
하이트진로  
청정라거  
'테라' 출시

L1



## 지능형 CCTV로 범인 잡고, 데이터 수집해 혁신 정책 서울시, IoT 센서 5만개 설치… 데이터로 시민 삶 바꾼다

오는 2022년까지 1.4조 투입  
도시 데이터로 스마트 행정 펼칠 것  
'빅브라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서울시가 가상 공간에 서울을 똑같이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서비스를 구현한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가시권이 어디까지인지,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소에는 강한 조도의 가로등을 설치해 밝은 빛을 내리쬐는 방식으로 시민 행동을 조절,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한다. 스마트폰으로 공유주차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공유주차 시스템도 선을 보인다.

박시장은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인터넷(IoT) 5만개를 설치해 시민 행동 패턴 등을 파악해 올빼미버스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대로 분류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범죄 예방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범용 CCTV는 '지능형 CCTV'로 교체한다. 지능형 CCTV에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 쌔움, 방화, 배화 등 특정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능이 탑재된다.

대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시장은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의료정보를 익명 처리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해결책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빅데이터 수도'로 만든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에 5만개의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 도시 현상(미세먼지, 소음, 바람, 야간 빛 세기)과 시민행동(유동인구, 차량이동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는 센서로 모은 도시 데이터를 이용해 '스마트 행정'을 선보인다. 조도 센서로 확보한 야간 빛 데이터를 분석해 밤길 안전 대책을 만들고, 지역별 한파 데이터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시립병원·보건소·찾동 간 건강·의료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본인동의 전제)을 개발한다.

아울러 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 기능을 다산콜 상담업무에 시범 적용한다. 시민의 주요 관심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딥러닝 기술로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 공공서비스 예약, 평생학습 추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된 양천구와 성동구에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관리한다. 성동구는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여부를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다. 이제 자동으로 전력 사용량을 감지해 현장 단속 없이 정화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도시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세계 전자정부 1위 위상을 넘어 가장 앞서나가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복지 역차별' 9만명 불이익 해소 절실

낮은 공제 기준에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 정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해야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경기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경기도청 전경.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불법 노점 사라진다

영종로 등 3곳서 시범 실시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종로 등 3개 지역을 거리가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노점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시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서울시 내 거리가게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한 1883곳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금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버스·택시 대기공간까지의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 할 소방·안전 필수교육 사항 등이 담겼다.

위치가 부적정해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

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차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종로 등 3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봄 시샘하는 추위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창룡문 인근 성곽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 아파트별 천차만별

서울 승강기 사용료 최대 55만원  
표준안 마련해 사용권고 시행할 것

서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나르면 평균 1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단지 1971곳을 대상으로 이삿짐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3.9%(1652곳)가 사용료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는 평균 10만4000원, 최고 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 형태별로 보면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는 49%(965단지)로 가장 많았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는 35%(687단지), 무료

인 단지는 16%(319단지)로 조사됐다.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총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이삿짐 종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랐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로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천차만별인 승강기 사용료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올해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와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에 공개된다. 시는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